

김여정 주도 대남 군사행동, 김정은이 막았다...역할 분담

김여정 대남 총괄 나서다 국면전환 위해 '김정은' 등장 군사행동계획 '보류' 상황에도 향후 김여정 역할 주목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주도해 온 대남 군사행동에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동을 걸었다.

김 위원장이 동생이자 2인자인 김 제1부부장이 '악역'을 맡았다면 1인자인 김 위원장은 '선한역'을 맡아 역할을 분담하는 전략으로 한반도 긴장감의 수위를 조절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24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23일 노동당 중앙 군사위원회 예비회의를 주재하고 대남 군사행동계획을 보류했다.

최근 한반도 내 위기감 조성 역할을 맡아 온 것은 김 제1부부장이었다. 발단도 김 제1부부장이었다. 김 제1부부장은 지난 4일 담화를 내고 대북 전단(빠라) 살포를 이유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금강산 관광지구·개성공업지구 철거 등을 언급했다.

김 제1부부장의 말대로 지난 9일 남북 통신연락선이 모두 끊긴데 이어,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가 실제 이뤄졌다.

또 김 제1부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보내는 특사 파견 요청까지 직접 거절하기도 했으며, 문 대통령을 겨냥해 거친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다.

지난 20일간 대남 사업을 모두 총괄해 온 김 제1부부장은 강경한 대남 정책과 그에 따른 실행력을 보여주면서 사실상 대외적으로 '악역'을 자처해왔다.

그러나 이날 1인자 김 위원장이 깜짝 등장해 파국으로 치달던 남북관계에 잠시 틈을 내어줬다. 김 제1부부장과 비교해 사실상 '선한역'을 맡게 된 김 위원장은 대남 군사행동까지는 막음으로서 일시적으로 한반도의 긴장 국면을 해소한 것이다.

김 위원장이 보류한 북한군 총참모부의 대남 군사행동계획은 김 제1부부장이 북한군에 준 업무였다. 김 제1부부장은 지난 13일 담화에서 "다음번 대적 행동의 행사권은 군 총참모부에 넘겨주려 한다"고 했으며,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16일 "대남군사적행동계획들을 작성해 당중앙군사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전날 열린 중앙군사위원회 회의에서 대남 군사행동계획에 대한 '보류'가 아닌 '승인'이 이뤄졌다면, 이후 발생하는 일들의 책임자는 김 위원장이 된다. 향후 김 위원장이 직접 나서 대남 및 대미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두기 위해 이번 강경 대남 정책에서는 빠져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 제1부부장의 위상이 높아졌음에도 아직 군에는 영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대남 군사행동계획이 완전한 '취소'가 아닌 '보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향후 김 제1부부장의 북한 내 입지 등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북한의 역할 분담에 대해 정부도 미리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었다. 이미 올해 초부터 이같은 역할 분담이 종종 확인됐기 때문이다.

김 제1부부장이 지난 3월 3일 대남 비난

담화를 냈으나, 다음 날인 4일 김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낸 바 있다. 또 지난 7일 김 위원장은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북한 내부 문제만을 다뤘지만, 당시 김 제1부부장은 대남 강경 정책과 관련한 말을 쏟아내곤 있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여정 부부장이 군사적인 전문지식(을 활용한 역할) 보다는 2인자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면서 임무를 분담하고 있다"면서 "실질적 악역은 밑에서 담당하고, 나중에 최종적 남북관계 개선이나 북미관계 개선 등 정책적 변화가 올 때 김 위원장 이름으로 해서 위상을 더 확고히 하겠다는 부분"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김 제1부부장의 위상에 대해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 제1부부장이 강경 대남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과 관련 최근 "북한이 밝힌 것처럼 대남 사업(을 맡은) 제1부부장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공식적인 직책과 김여정의 위상과는 꼭 일치하지 않는 듯해 보이며, 시간을 가지고 분석해 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뉴스1

당정 "日 추가 무역보복 예상...소부장 전략 시즌2 시작"

"일본발 위기 발생 우려...당정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 당정, 인력수급 구조 문제... "퇴직인력 中 소 재취업 강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산업 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일본 강제징용 기업에 대한 법원의 국내 자산 매각 절차 돌입으로 추가 무역 보복 조치가 예상됨에 따라 당정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국산화 대책을 보완·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소부장 당정 점검회의에서 "일본의 추가 보복 시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대책 추진 현안을 점검·보완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소부장 산업 전략 시즌 2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법원이 일본 강제징용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 절차를 시작하며 투자자들의 추가 보복이 예상된다"며 "보복 조치 이후 시작할 게 아니라 가능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미리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해서도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더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며 "소부장 경쟁력을 높여서 글로벌 공급망 강화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해 소부장에서도 경쟁력 강화가 필수다"고 했다.

이어 그는 "장기적 안목으로 소부장 산업의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를 준비하겠다"며 "정부와 함께 기술 자립, R&D(연구개발) 확대, 기업 육성 등 필요 대책을 더 가다듬겠다"고 덧붙였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은 소부장 산업 인력 관리에 대한 문제 제기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김윤호 기자

'묻지마 범죄'에 법원 '묻지마 기각' 경중

소병철 의원, "국민들 목소리 귀 기울이는 것이 사법개혁 출발"



소병철 의원

법원의 묻지마 범죄에 대한 연이은 영장 기각에 대해 법원이 여성과 아동과 같이 특히 범죄에 취약한 국민들의 불안한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 의원은 23일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업무보고에서 최근 서울역에서 발생한 묻지마 폭행사건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두 차례 영장을 기각한 사유가 국민들과 법 감정과 매우 동떨어져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소 의원은 가장 유사 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국민들은 보복범죄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안에 떨며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법원만 귀를 닫고 있으니 사법개혁의 요구가 점점 더 높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2014년~2018년 5년 간 구속적부심 인용 및 기각 현황 자료)를 근거로,

법원이 영장제도를 실질적으로 본안 재판과 같이 운영하고 있는 탓에 구속 후 구속의 합당성을 판단하는 구속적부심이 사실상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는 점도 제기했다.

이어진 보충질의에서 소병철 의원은, 국민들의 불안에도 불구하고 '인신구속은 엄격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법원행정처 조재연 처장의 원칙적 답변에 대해 "사법 개혁에 대한 절실함이 아니라 절망감이 느껴졌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사법기관은 결코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 공수처가 도입된 이유도 검찰이 스스로 개혁을 못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어,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이렇게 자꾸 높아지면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재판소원 제도도 곧 도입될 것이다. 국민이 원하는 사법개혁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부터 출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 개혁하는 주체가 되지 못하면 개혁의 대상 객체로 전락한다"는 사실을 명심해 달라고 맺음말을 하였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 062) 971-7400
광고 직통 224-5800
팩 스 222-5547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